

DS 적자 땀 성과급 '0%'… DX 손실에도 '1000주' 요구 논란

(다바이스솔루션)

(다바이스경영)

삼성 동행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
조합원 석달 새 10배 넘게 급증
1000주 전원 지급 땀 11조 규모
DS 6억·DX 600만원 보상 격차

사측, 추가보상 대신 DX TF 제안
내년 임금교섭서 보상체계 재논의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낸 삼성전자 다바이스경영(DX)부문에서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23년 적자를 낸 반도체 부문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적자 사업부에도 조 단위 보상이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삼성전자동종조합 동행(SECU)은 전날 'DX 경영실적 책임 및 보상 관련 피플팀 미팅'을 열고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추가 보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동행노조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1일 서초사옥 앞 집회에는 1500여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고 노조는 3000명까지 예상한다. 9월에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열린 'DX부문 사기진작 및 보상방안 마련 촉구 집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는 한남동 집회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수원사업장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0명이 모였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같은 회사, 같은 권리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DS, 2023년 적자에 OPI 0%
삼성전자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보상

을 달리해 왔다. 대표 성과급인 초과이익 성과급(OPI)은 사업부가 연초 목표를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재원으로 지급하며 한도는 개인 연봉의 50%다.

이 원칙은 반도체 불황기에 그대로 적용됐다. DS(다바이스솔루션)부문은 2022년도분으로 한도인 50%를 받았지만 2023년 14조8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그해 실적분 지급률이 0%로 책정됐다. 이후 실적이 회복되자 지급률도 2024년도분 14%, 올해 지급된 2025년도분 47%로 올라섰다.

반면 DX는 올해 2분기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8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DS가 89조 2000억원을 차지했고, MX(모바일)·네트워킹은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VD(영상디스플레이)·DA(생활가전)도 적자를 기록했다.

◆DS 6억 vs DX 600만원

갈등의 출발점은 올해 임금협약이다. DS부문은 특별경영성과급 10.5%와 OPI 1.5%를 더해 메모리사업부 직원 기준 6억원에 가까운 보상을 받지만, DX부문과 C&S사업팀 4만9345명에게는 지난달 8월 1

인당 600만원 상당 자사주가 돌아갔다.

노조 요구대로 1000주씩 지급하려면 4934만5000주가 필요하다. 지난 7월 종가(23만1000원) 기준 11조3987억원어치로 실제 지급분의 45배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실적과 무관한 조 단위 보상은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적자에도 임원들이 거액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공시에 따르면 노태문 DX부문장은 장기성과인센티브(LTI)로 약 57억7000만원, 전영현 DS부문장은 약 26억6400만원 상당 자사주를 받았다. 다만 LTI는 이전 3년 실적을 평가해 이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DX 실적은 향후 지급분에 반영된다.

◆사측 "협약 이행 의무"… TF 제안

요구 규모와 함께 절차 문제도 제기된다. 동행노조는 지난해 말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다가 사후조정을 앞둔 5월 이탈했다. 임금협약은 찬반투표에서 73.7%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후 노조가 낸 교섭 중지 및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이 전날 요구한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금협약이 체결된 만큼 회사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신 사측은 내년도 임금교섭에서 이른바 'DX 패싱'을 막을 'DX TF' 구성을 제안했다. 논의가 2027년 교섭으로 넘어가면서 동행노조의 발언권도 커질 전망이다. 조합원은 노조 홈페이지 실시간 집계 기준 11일 오전 3만293명으로 석 달 만에 열 배 이상 늘었다.

성과급 재원 논의는 정부로도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고용노동부에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성과급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롤이 된다"며 "성과가 직원과 주주뿐 아니라 협력사 등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는 이윤배분의 원칙과 제도적 체계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메가특구법 '주52시간 예외' 논란… 노동계 "수용 불가"

상위 3% 관리·R&D 주52시간 제외
파견 확대·기간제 4년 연장 검토
선택근로 정산기간 6개월로 확대
민주당 "혁신·건강권 함께 살릴 것"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이 노동계 반발에 직면하며 쟁점화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파견근로자 업무 확대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선 이를 반대하는 강경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법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태홍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션'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소득 상위 3%'는 약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인데, SK하이닉스의 평균 연봉은 1인당 1억8500만원, 삼성전자의 평균 연봉은 1억5800만원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제도에 포함되는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파견 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

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파견 하용 업종은 32개로 제한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 등은 파견이 금지돼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메가특구 내 반도체 기업 종사자가 16주 연속으로 주80시간 일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로 26주 평균 주52시간을 맞출 수 있어 총근로시간 한도를 맞출 수 있다.

진보정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메가특구법에

'노동계약안'이 포함될 경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10일)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은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온 노동규제 완화 움직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메가특구법 상 노동규제 완화안의 선결조건을 '노동계의 동의'로 내건 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노동계의 동의가 없어도 그렇게 해선 안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여온 것인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건강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이윤을 우선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정종덕·정혜경·손술진 진보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법을 두고 "산업을 침단화하겠다

면서 노동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다. 연구개발 노동자도 과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소득을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사업인 만큼 메가특구법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선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철민 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특위 위원들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저항, 의문, 오해도 있다. 이를 불식시켜나가고, 앞으로 지역, 노동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면서 메가 프로젝트 성공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일해나가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경사노위, 'N% 성과급' 사회적 대화 의제화 검토

삼성전자 노사 갈등 해법 모색 나서
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대화에 무게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는 논의 관망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른바 'N% 성과급' 논란을 사회적 대화 의제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 성과급이란,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비례해 지급하는 산정기준(특정 비율)을 만들자는 노동계의 요구다. 삼성전자 노사가 이를 두고 대립해 왔다.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인 경사노위의 김지형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인가.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가 단체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장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판단해 가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법원 판단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는 내부적으로 전문가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해,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의제화하

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고 말했다. 또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 관련해서는 노·정 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고, 노·정 간 대화도 시작된 만큼 경사노위가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고 했다. 이어 "추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지문을 요구하거나, 노장이거나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52시간제 예외 문제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 해소보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고 우려를 풀어 갈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